

일본 시민들의 '뜻 깊은 사죄'...나주에 동학혁명 사죄비

“1894년 일본군 ‘전원살육작전’에 조선농민 처절하게 희생” 비문 명시 일본 시민단체 ‘동학기행단’ 2006년부터 탐방·사죄...성금 모아 기부 일본 정부 대신 시민들이 나서 관심...나주시·원광대 등 동참 10월 건립

동학농민혁명(1894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나주에 오는 10월 뜻있는 일본인들이 참여한 사죄비가 세워진다.

최근 일제강제동원 배상문제를 두고 일본과 전범기업의 반성이나 사죄보다는 정부가 해법안을 내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가해국 시민들의 사죄비 건립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당초에는 ‘위령비’ 형식으로 추진됐으나 일본군의 잔인한 작전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담아 ‘사죄비’로 변경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비문에는 가해국 시민들이 피해국에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과거로부터 비롯된 아픈 역사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의미를 더하고 있다.

나주동학농민혁명 위령비 건립추진 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건립이 논의돼 온 ‘나주동학농민군 희생자를 기리는 비’에 새겨질 최종 비문이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죄비 비문에는 “1894년 12월 10일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가 나주성에 입성한 이래 최후 항쟁 중이던 동학농민군들이 근대식 소총과 전술로 무장한 일본군의 ‘전원살육 작전’으로 처절하게 희생됐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한일 두 나라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뜻 있는 시민들이 나섰다. (중략) 일본 시민들께서 먼저 사

죄의 마음을 담은 성금을 자발적으로 모아 주셨으며 여기에 나주시를 비롯한 한국 시민들이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사죄비는 올해 나주 시민의 날(10월 30일)에 건립 예정이며 정확한 장소는 현재까지 미정이다.

사죄비 건립의 주체는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시민 동학기행단’과 나주시, 원광대 원불교 사상연구원이다. 당초에는 역사학자 개인의 관심에서 시작됐지만 양국 시민(단체)으로 확대된 것이다.

나카츠카 아카리 일본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는 일찍이 동학혁명을 연구해 온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과 함께 동학혁명 전투지 답사 등을 진행하며 일본의 침략에 맞선 동학혁명의 진실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나카츠카 교수는 ‘후지국제여행사’와 함께 한국의 동학혁명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동학기행단’이란 이름으로 기획해 운영했다.

2006년 일본인 25명의 참여로 시작된 ‘일본 동학기행단’은 지난해까지 292명이 방문했다. 당게는 6박 7일간 한국의 동학 유적지를 방문한 일본 동

학기행단은 일본의 만행에 깊이 사죄,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부금을 선뜻 내놓기도 했다. 이렇게 모금된 기금은 118만 엔(약 1171만원).

여기에 지난 2019년 나주의 12개 시민단체 등이 모여 위령비에 대한 목소리를 냈고 박 전 총장과 함께 원광대 원불교 사상연구원 등이 뜻을 모았다. 나주시와 원광대 역시 모금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2000만원 가량이 모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0월에는 일본 시민들과 원광대, 나주시가 공동으로 나주동학혁명 재조명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같은 날 열린 나주 동학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에서 훗카이도대 이노우에 카츠오 교수가 발표한 사죄문이 사죄비 비문 내용을 결정하는 바탕이 됐다.

이노우에 교수는 사죄문에서 “잔혹한 토벌전의 역사를 발굴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데 대해 일본인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역사적 사건의 전모를 한국과 일본 현지에서 밝혀내고 발굴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주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군과 일본군의 적극적인 방어로 농민들이 무참히 학살된 아픔이 새겨진 곳이라는 게 역사학자들의 설명이다.

이노우에 교수가 공개한 ‘쿠스노키비요키치 상등병의 준군일지’에는 “장흥부 전투(1895년 1월 8일-10일) 이후 일본군에 포획돼 고문당해 죽은 이들이 680명에 달하며 근방에는 시체로 인한 악취가 진동하고 땅은 죽은 이들의 기름으로 하얀 은처럼 얼어붙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은 “나주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다. 그러한 나주에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이 자발적인 성금을 내세우는 최초의 사죄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진정한 사죄나 반성 없이 외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간 과거 문제에 대해 가해국이 진정으로 반성할 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하나의 모범 사례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뜻 깊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공공주택 공사 중 나온 매립 폐기물 처리비용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지자체가 비용 부담”

공공임대주택 공사 도중 나온 지하 매립 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지자체가 비용을 책임지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양영희)는 LH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비용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LH와 여수시는 2017년 9월 2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여수 서교지구’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업을 위해 2019년 시험 터파기 도중 부지내 매립된 폐기물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된 LH는 여수시에 폐기물 처리를 요청했다.

여수시는 매립폐기물 처리 비용은 ‘업무협약 변경 조항’에 해당한다며 “사업비 효율에 따라 협의하자”고 했으나 LH측은 폐기물처리 업무분담 조항을 들어 폐기물은 여수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거부했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LH가 지난 2021년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포함한 16억원 상당을 청구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LH측이 주장하는 업무분담 조항상 ‘폐기물’은 체결 당시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폐기물이라고 봐야 하지만 지하 매립폐기물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LH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LH가 항소를 제기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부지내 폐기물은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도 포함된다”면서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있는 폐기물도 한정돼야 한다고 해도 여수시가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해야 할 주체라는 점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는 주택 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사업 부지 제공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부지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그 처리비용 역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달빛 플리마켓 시민 발길 북적
광주 시민들이 23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달빛 플리마켓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제작한 수예공품과 미용제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름만 빌려 가짜 전세 계약...50억 대출사기

전남경찰청 3명 구속·4명 입건

거짓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하는 전세자금 수신택권을 받아 쟁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가짜 임대차 계약자들로부터 이름만 빌려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금융기관에서 약 50억원을 대출받아 쟁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 청년에게 보증해주는 전월세 지원제도가 실거주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실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광주와 화순, 여수, 나주, 서울, 경기 광주 이전 등지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 총 16채를 허위구매자를 내세워 담보대출로 구매한 뒤 변명에 이용했다.

명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인당 2000~5000만원 정도를 주고 가짜 임차인들을 모집해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한 것이다.

이들이 대출받은 전세자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위탁보증하는 것으로 대출 은행에서 대출 및 보

증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임차인이 연체금 상환 등 채무변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해 준다.

경찰은 앞으로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이같은 허위 전세자금 대출 건들이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기금액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한 은행에 부실채권을 안기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명의대여자 30여 명, 계약 업무 등을 처리한 공인중개사도 공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일자리안정지원금 허위 신청...4600만원 쟁긴 업주 징역형

허위로 일자리안정지원금을 신청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농협회사법인 40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 3곳에서 근무하는 31명의 일자리안정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해 총 4600여만원을 쟁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자리안정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평균보수액 일평균액 이하(2018년 190만원, 2019년 210만원, 2020년 215만원), 한달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이 지원조건으로 근무자 1명당 월 9~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근무자들의 실제 급여가 지원조건을 초과함에도 지원조건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싼
지분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신안동 상업용지, 매매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문의. 010-3605-5000